

새 정부의 출범과 충남 지역발전의 과제

강 현수

(중부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1. 머리말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 과정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 “지방의 시대의 개막”을 강조하였던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여러 자리에서 수차례 걸쳐 자신의 “지방 우선” 사고를 표명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 보여주었던 이 같은 여러 언행으로 미루어 보아, 이제 막 개막된 노무현 새 정부의 5년 기간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우리나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수도의 이전 예상 대상지인 충청권 지역은 국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기대가 높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주요 지역 정책 프로그램이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간단하게 모색하고자 한다.

2. 지방의 요구와 새 정부의 지역발전 구상

오랜 기간동안 중앙집권-서울집중 구조가 누적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구조의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과 기능 분산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지난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도 이 같은 분권과 분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줄지 않았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가 수미일관되지 않았고, 중앙집권, 서울집중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는 중앙행정관료와 중앙정치세력, 이 구조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여러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분권과 분산 정책의 구

체화, 가시화에 명시적, 암묵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상황은 더욱 심해졌고, 이 결과 수도권에서는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과 범죄 등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불경제와 갖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되고 인재가 유출되어 심각한 발전의 장애에 가로막히게 되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심화되고 지방 주민들은 소외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를 개혁하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분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지방의 요구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지역의 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족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이 있다. 이 운동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대선 기간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국민협약”을 체결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그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지방의 어려운 사정과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지방이 처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지역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공언은 취임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비상한 결의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가 이끄는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 이름 짓고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지역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이다. 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는 다시 구체적으로 첫째,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둘째,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셋째,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넷째,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네 가지 정책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다.¹⁾ 이제부터 노무현 정부의 이같은 지역 정책 프로그램이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과, 지역 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 중 크게 세 가지 부문, 즉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발전 전략, 지역특성화와 지역 혁신체제 구축 전략,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각각 살펴보려고 한다.

1) www.knowhow.or.kr 참조

3.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 발전 전략

노무현 정부의 지방 발전 프로그램 중에 가장 으뜸가는 것이 지방 분권의 획기적 추진 정책이다.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지방분권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10 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던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조류인 세계화, 지방화, 다원화 추세 속에서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획일적 정책 수립과 집행, 하향적 지시와 통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역 사회의 복잡 다난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지역 발전을 꾀하기에는 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지구화된 개방 체계 속에서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보다는 지역이 더 중요한 공간 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중앙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행정규제 지침에 따라 일률적인 규제가 주종을 이루었던 지난날의 지방정부 행정 대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부응하여 노무현 정부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분권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지역 개발의 추진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시나 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권은 지방에 권한 뿐만 아니라 책임도 이양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지 못했던 핑계거리 구실을 해왔던 것이 바로 지방의 자체 역량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개막될 지방 분권 시대에, 충청남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지역 스스로 지역 발전의 전략을 구상하고 집행 수단을 마련, 실행할 수 있는 지역 내부의 역량 배양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부의 산, 관, 학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들 상호간의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 스스로의 정책개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 자체의 전문가

의 육성과 훈련을 적극 도모할 때 달성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지방 분권 그 자체만 가지고는 바람직한 지역 발전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 다른 보완적인 프로그램 없이 달랑 지방 분권, 즉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만 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이 폭넓은 철학적 사고나 별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첫째, 자칫 지방분권이 지방정부 관료와 지역 특권층의 권력만 강화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다운 의미의 지방분권은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 민주적 지방분권이다. 즉 지방분권이 지방정부 자치 수준을 넘어서 주민자치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권화된 자치단체에 주민이 참여하여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때 비로소 소수 특권층이나 엘리트 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민주적 지역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분권과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의 내부 혁신이다. 지방 정부, 지역 대학, 지역 기업 가릴 것 없이 과거의 수동적 행태와 구습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내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예컨대, 엄청난 자금이 이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자율로 집행될 때, 이 돈을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가에 대한 지역 스스로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또한 과연 이러한 돈이 지방을 위해 진정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돈이 부도덕하거나, 혹은 무능한 지방정치인이나 지방행정관료, 이들과 결탁된 소수 지방기업인이나 지식인들만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는지를 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지방 분권과 관련하여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점이, 지방분권은 각 지역간의 불균등 현상의 악화,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기존에 산업기반이나 사회하부구조가 발달된 지역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스스로의 발전 잠재력을 크게 살릴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지방분권을 통해 가속화될 지역간 경쟁 과정에서 오히려 도태, 퇴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분권과 동시에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가 반드시 함께 마련되도록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 특성화와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노무현 정부는 지역 발전 전략의 구체적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 특

화산업의 육성 및 이를 뒷받침하는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 시스템(RIS) 구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지역특성과 비교우위요인을 반영하여 기술, 인력, 자본을 집중 투입할 전략업종을 선정·육성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지역별로 산업 클러스터(군집)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연계하여 입지시키고 이를 중점 육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화의 핵심 거점이 바로 지방대학이다. 지방대학의 역할은 지역 혁신의 원천이자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의 장소, 그리고 지역 혁신 네트워크의 정점으로 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방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집적(cluster)된 지역산업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network)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구상의 핵심도 역시 지역 특화된 집적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혁신체제이다. 특히 지역혁신체제라는 다소 낯선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체제란 혁신 관련 시설과 제도의 유기적 결합, 산업 집적의 효율성, 경제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는 지향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산업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역혁신체제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 지자체 등 지역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일정 지역내의 네트워크 체제이다. 최근 서구에서도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이 지역 산업 육성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강조하는 발상으로서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국가 역할이 축소되고,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역 및 도시의 역할이 각 분야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지역 스스로 세계무대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경쟁체제와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지역혁신체제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함의는 기업이나 지역의 발전이 첨단기술이나 고급인력, 자금, 물리적 하부구조 등 물적 요소의 투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의 전달에서 찾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요소는 지역내 각 경제 주체들간의 지식의 원활한 흐름을 가능케 하는 상호 협조체계 및 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함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지역 전체의 혁신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 내 혁신

신 주체들간의 교류 및 학습네트워크, 시너지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나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대로 이를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충청남도 지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관계로, 지역 경제 구조 역시 수도권과 강한 연계 관계 (부정적 의미로는 의존 관계) 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도권과의 깊은 연계 관계는 이것이 충남 지역 경제의 지역적 통합성을 해치고 있다는 약점을 가져올 수가 있고, 독자적인 특화 기능 미흡을 가져올 수가 있다. 또한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 북부 지역과, 충남 남부 지역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또 하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혁신체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간의 상호 연계 및 기업 지원 기관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종 산업의 클러스터를 충남 내에 형성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클러스터의 육성은 또한 수도권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충남 경제의 통합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충남 남부 지역의 경우, 대전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와 좀 더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면서도 지역내 기업간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얼핏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충남 지역 혁신체제의 향후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 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향후 충청남도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제조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의 집적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내 자원을 최대한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자원에는 물적시설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유대, 지원체제, 상호교류망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지역내 비물질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외부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기업유치나 시설입지는 경제상황 등 돌출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역내 정신적 유대관계를 구축하면 그러한 위험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이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대세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내 기업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활발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정부의 조정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외부로부

터의 기업유치나 지역내 유대관계를 조성하는 초기과정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지역혁신체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지역이 자체적인 경제시스템을 갖춘 자생력이 강한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체와- 지역주민·기업·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5.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발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학문 등 사회 거의 분야에서 핵심 의사결정 및 중추관리기능이 서울과 그 인근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 현재 서울반경 40km권 이내 지역에 중앙행정부처의 100%, 공기업본사의 81%, 100대 기업본사의 약 90%가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²⁾ 특히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의 원천인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종 공공단체와 민간기업이 동반 집중됨으로써 서울 일극 집중도권 집중에 대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서울 일극 집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서울의 지나친 과밀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 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그런데 이 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대선 막바지 가장 뜨거운 선거 쟁점이 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과 반비판의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한나라당 측에서 행정수도 반대 논리로 가장 목소리 높였던 주장으로는 행정수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행정수도 건설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이 공동화되고 주택가격 폭락하여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후보 측에서는 행정수도 건설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 비용도 현 정부 청사의 매각 대금과 개발토지를 민간에 분양한 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으며, 수도권은 오히려 동북아 중심지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논란 과정을 거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수도 건설 일정과 추진 기구 구성이 공표되었다.

▲2003년 = 추진조직 정비. 필요시 특별법 제정. 현지조사 완료

▲2004년 상반기 = 행정수도 부지 예정지 지정

▲2005-2006 = 설계

▲2005-2010 = 부지조성공사 따른 보상

▲2007년 상반기 = 먼저 이주하는 선도부처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 착수

2) 박양호, (2003),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간 월간 「국토」 2003년도 1월호

▲2010년 = 선도부처 입주 개시

앞으로 노무현 새 정부는 선거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겠으나, 향후에도 계속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 예컨대 야당인 한나라당, 서울에 근거하고 있는 여론주도 계층 및 파워엘리트 집단, 조선, 동아, 중앙 등 서울소재 중앙보수간지 언론들의 심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충청권 지역 주민들과 지역 균형, 지역 분권 지지자들 중심으로 행정수도의 조속 추진과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압력도 드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행정수도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충청 지역 전체의 획기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첫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 수도 건설 자체에 대한 반대와 저항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저항에 맞서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와 필요성, 당위성,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충청권이 앞장서서 나서주어야 한다. 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강력한 추진 주체가 될 새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 기구에 대한 압력과 지원을 통해, 행정수도 건설이 당선 후 폐기되어 버리는 공약(空約)이 아닌, 반드시 실현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미 제기되었거나 향후 제기될 행정수도 반대 논리의 극복을 위한 각종 연구들이 시급히 필요하다. 대선 과정에서 주로 제기되었던 행정수도 반대 논리로

- ▶ 건설 비용 과다론
- ▶ 수도권 공동화와 부동산 폭락에 따른 경제 위기론
- ▶ 국토 방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도 남행 반대론
- ▶ 용수 부족론

등이 있었으며, 앞으로 계속 문제 제기될만한 것들로

- ▶ 통일 고려 행정 수도 건설 시기상조론
-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효과 무용론 : 또 다른 일극 집중론
- ▶ 강원, 영남, 호남 소외론
- ▶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한 수도권 집중 강화론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반대 논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행정수도 건설 당위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행정수도 추진의 원동력이 상실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 논리를 극복하고 행정수도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라는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행정수도 건설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이미 벌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로는 부동산 투기와 개발 이익 독점, 주택토지 가격 상승 등이 있다. 특히 충청권 내 지나친 유치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충청권 내부에서 지역간, 정파간 이해 관계를 초월한 행정수도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의 통일이 필요하다. 최근 대전, 충남, 충북의 시민단체들이 분열보다는 연대를 통한 공동 협력을 다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시장, 충남, 충북지사가 함께 모임을 갖고 3개 시도가 협력과 공조를 다짐하는 등 충청권 내부의 행정수도 유치 경쟁 자체 분위기는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충청권 내부에서 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소지역주의 발호하지 않도록 지속적 경계가 필요하다.

셋째, 행정수도 건설이 충청권 전체 지역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플랜 구상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의 입지나 기능이 서울 중심 연계형, 즉 서울 의존형 행정수도 보다는 충청권 자족성을 갖춘 행정수도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충남 도청의 입지는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행정수도의 입지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에, 즉 행정수도의 영향력과 발전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소외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행정수도 건설의 가시화 이전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적극적 반대 입장의 제시가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새 정부 경제 부처와 수도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행정수도 건설 추진보다 선행되는 것은 충남 지방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선행 행정수도 건설 추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 수도 건설의 추진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중앙부처 1-2개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의 조기 이전에 바로 착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이회창 후보도 주장한 공약이었으므로 이미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6.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서울에 위치한 중앙정부가 지역 발전의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주체였으나, 앞으로 지방화, 분권화가 가속화된다면,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 차원에서 벌어지는 세계화 경향과 경쟁 강화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전까지의 국가 발전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 도래할 지방화 시대에는 다양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각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에 지역개발의 기본 전략은 전국 획일적인 발전모델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 환경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 이때 도나 시·군등 지자체와, 민간기업, NGO등 다양한 조직·개인이 참가하여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전체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들어선 노무현 정부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방 중시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시대는 지역 발전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정부가 위에서 베푸는 시혜적 조치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가 아니다. 지역 주민 각자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지역 발전 노력의 토대 위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이 결합될 때에 미래 지향적 지방분권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에 의한 견제·통제 기능을 마련하는 시스템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을 위시한 여러 노무현 정부의 지역 발전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여기에 대응해 충청남도의 행정기관과 여러 지역 주체들이 올바르게 대응한다면, 충남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현수 (2000), “지역경쟁력의 원천인 지역혁신체제”, 월간 『자치공론』 2000년 4월 호.
- 강현수 (2002)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충청남도 전자정보기기산업을 사례로”, 『국토와 환경 : 공간계획론의 새로운 접근』 도서출판 한울.
- 김용웅, 외 (1999)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지역 창출』, 국토연구원
- 박경, 박진도, 강용찬, (2000), “지역혁신 능력과 지역혁신체제”, 한국공간환경학회 편, 『공간과 사회』, 통권 제 13호.
- 박양호, (2003),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간 월간 「국토」 2003년

도 1월호

성경룡. 2002.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새천년 민주당. 「행정수도 이전 토론회」 주제발표자료

충청남도, 산업연구원, (2000), 『충청남도 산업진흥 실행계획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3각 테크노벨트 조성방안』